

## 의료에서의 근대를 향한 여정

이현정, 김태우 엮음 『의료: 아시아의 근대성을 읽는 창』을 읽고

심재만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참으로 폭넓은 주제와 소재의 의료인류학 분야 연구들이 한 권의 책으로 엮였다. 사회학의 행위이론적 관점에서 의료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온 서평자의 입장에서, 학기 말 망중한 가운데 흥미롭게 정독할 수 있었던 값진 책이다. 이 수많은 흥미로운 주제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지만, 근대성 혹은 근대라는 주제 아니면 어떤 주제로 이 폭넓은 사유를 담을 수 있을까 수궁하기에 이른다. 많은 이견이 있는 근대성 혹은 근대의 의미를 미리 정의하지 않고 구체적 맥락에서 그것이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 이 책의 기획에도 수궁하기로 한다. 근대의 구체적 모습들을 읽는 재미가 있을 것이고, 남겨진 빈자리가 무엇인지를 그 가운데에서 무리 없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 근대에 대한 정의가 전혀 없지는 않고 최소한의 정의에서 출발한다. 그 최소주의가 반갑고 그 내용 역시 합리 혹은 합리성을 최소한의 정의 위에 놓으려고 했던 막스 베버의 기획을 닮은 듯하여 반갑다(Kalberg, 1980). 제1장은 근대를 인류가 좇는 이상적 발전의 모습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굳이 포스트 근대를 상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 근대를 향해 진행되어온 과정을 근대화로 정의한다. 그런데 이 책은 더 나가 근대화의 ‘성공과 변영’을 얘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그에 묻혀 있는 ‘희생과 그림자’를 얘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제한다. 그래서 제1장 말미에서 성공과 변영에 가려져 있는 희생과 그림자를 드러내겠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책에서 근대화의 긍정적 모습보다는 부정

적 모습을 보고하는 연구들을 읽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서평자는 앞서 제시한 최소한의 정의에 기반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둘 모두로서의 근대에 대한 연구 기획은 애초 왜 이뤄지지 않았나 궁금하였다. 또 근대의 성공·번영 대 실패·희생의 구도 대신 근대성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기록이라는 연구기획은 왜 이뤄지지 못했는지 궁금하였다. 이와 같은 궁금증에서 이하 6개장으로 구성된 독립적 연구들을 각각 차례로 논평해 보았다.

제1장에서 표현된 다소 부정적 시각에서의 근대 이해는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달리 혹은 온당하게 다시 표현할 방법은 없었는지, 어떻게 다시 표현될 수 있는지에 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머지 장을 읽고 논평하였다. 구체 곧 각각의 경험적 연구장들은 언제나 훨씬 많은 해석, 곧 재현의 가능성, 자주 연구자 본인마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가능성을 담는 것이므로 논평자는 그 디테일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논평자의 기본시각이 사회학 내 행위이론, 곧 사회적 행위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theory of social action)에 배태되어 있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흥미로운 것은, 이 관점이 인류학적 연구기획과 수많은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구자들 스스로가 제시하는 관점인 제1장에 비교해 이 서평이 보완적으로 읽힐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김태우는 현대의 생의학과 동아시아 의학이 어떤 만남을 이루는지 중국, 한국, 일본 등 3개국 간 비교연구의 형태로 펼쳐 보인다. 이를 통해 김태우는 근대의 본질, 즉 인류가 좇는 이상적 자기발전의 모습의 본질을 ‘표준 혹은 표준화’라는 핵심어로 풀어낸다.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의학과 관련해 표준화를 둘러싼 현대 한국의 경험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김태우가 무엇을 다루고자 하는 것인지 이 분야를 연구해오던 입장에서 흥미롭게 되짚어 보았다(Shim, 2018). 그러다 분류와 표준화가 가져오는 사회적 의미(주로 부정적인 결과들)를 다룬 과학 사회학 저서를 떠올리게 되었다(Bowker and Star, 2000). 해서 그 연장선에서 질문을 품게 된다.

김태우의 연구는 표준화를 좇는 방안의 다양성 부재(가령 자율성과 동행하는 표준화 부재)를 비판하고자 하는 건가 표준화 자체를 비판하는 건가? 근대, 곧 인류가 그리는 이상적 발전의 모습, 그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그 근대를 이루는 특정 역사적 방식 곧 ‘근대적’ 방식을 부정하는 점에서 보면 전자여야 한다(부연: 이 책에

서 근대는 두 가지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보편적 인류발전·변화의 이상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지극히 우연한 역사적 경험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전자의 의미로서는 긍정의 대상이기도 하고 후자의 의미로서는 부정의 대상으로 다루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점이 분명치 않다. 김태우의 연구 곳곳에서 표준화 자체가, 자율성(의료인의 자율성; 때로 의료 이용자의 자율성으로 읽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의 반대 명제로서 비판된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표준화 자체가 아니라 표준화의 주체(특히 국가와 제약기업)와 그 방식이 비판된다. 저자는 이를 친절히 풀어 설명치 않는다. 그래서 마치 표준화 자체를 부정하는 듯 읽힌다. 결론에서 주장하는바, 근대의 다양성(곧 이 글에서는 표준화의 다양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은 일견 느닷없이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동아시아 의학의 수많은 실천이 ‘학파’를 단위로 그 존재가 형성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에 대해 김태우는 애정 어린 공정을 보낸다. 다양한 개인적 실천들이 학파를 단위로 표준화되고 분류되는 과정에 대한 긍정인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양한 표준화 방식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고 결론지어 본다. 가령, 김태우식으로 말하면 의료인 단체나 다양한 학파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자율이 살아 있는’ 표준화가 그 하나일 것이다. 혹은 국가 중심성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시민사회가 동참하는 표준화 과정, 그리고 근대의 기획일 수 있겠다. 제약회사들에 의해서만 주도되지 않는 표준화와 근대화이겠다.

제3장. 이현정에게서 이상으로서의 근대는 필부필녀인 인민의 사회적 고통 해방으로 압축된다. 따라서 경제적·물질적 진보가 그중 하나인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연구자는 암묵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덧붙인다. 그래서 연구자가 가정하는 근대의 이상은 자유, 평등, 그리고 (물질) 진보의 어우러짐이라고 부를 만하다. 그에 견주어볼 때 중국 사회주의의 최근 경험(마오쩌둥의 사회주의 개혁 시기를 뜻하는지 덩샤오핑 이후의 개혁개방 시기를 이르는지 둘 모두인지 글은 분명히 구별하지 않는다)은 ‘자유’ 혹은 ‘평등’ 같은 근대적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이뤄진 ‘진보’ 혹은 진보에 대한 믿음의 역사로 일갈된다. 그 경험적 실재는, 우선은 사회적 약자 중 약자인 농촌 여성의 높은 자살률로 드러나고, 다음으로는 이에 대한 중국 사회(중국 정부·국가를 포괄해)의 대응방식으로 드러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구체화하는 현대 중국 근대에 연구자는 낙제점을 주었다. 낙제점을 받은, 자유·평

등 없는 진보로서의 중국 근대는 무엇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 “개혁개방이 가져온 물질적 풍요”와 농촌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방치”라고 글은 정리한다. 이것을 추동한 중심적 요인은 “국가주의적 돌진” 및 “엘리트의 정치적 기획”인데, 서구화로 대체된 근대화(가령, 서구정신의학과 전문가주의가 근대적 가치로 등장), 농촌으로 대변되는 전통 부정, 순응적 주체·개인 양성 등이 그 구체적 특징이라는 해석이다. 중국 사회주의 근대는 정치 엘리트의 근대일 뿐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데 중국 정부 혹은 국가를 중심으로 두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자살과 관련해 설립된 국가기구인 “베이징 심리위기에방중심”에 대한 역사적 설명은, 중국 근대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중심성, 서구 중심성, 국가의 대리로서 전문가 중심성, 전통 부정 등을 예시한다. 국가기구뿐 아니라 비정부기구(NGO)인 베이징 소재 “농가녀발전중심”에 대한 민속지에서도 그와 같은 국가 중심적 근대의 모습은 진하게 드러난다.

그 진한 국가 중심성에 독자는 좌절감마저 느끼게 된다는 점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 혁명 이래 중국사회의 거시구조라 할 수 있는 국가주의라는 역사적 위력이, 현대 NGO에서 진행되는 미시적 수준의 개인적 실천과 인식에 관한 민속지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과연 중국 근대에 개인의 자유 내지는 개인 간 평등의 가치가 표현될 수 있는 것인가? 그 단초는 없는가? 이 질문에 행여 긍정적 답을 찾을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농가녀발전중심에 대한 민속지를 다시 읽었다. 중국의 근대에 국가 외에 다른 주체는 과연 없는 것인지? 중국 인민의 주체·개인성이 구성되는 과정에 국가의 강력한 영향력 외에 다른 영향력은 없는가? 푸코식으로 정리하자면(Foucault, 1982), 주체 등장 과정에 개입하는, 국가와 전문가뿐 아니라 수많은 개인 간 관계를 포괄하는 중층적 권력관계를 민속지에서 들여다볼 수는 없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이러한 기대와 질문에 연구자 자신은 단호한 답을 내놓는다. 중국 여성들의 구술에서조차 자신들의 자살을 정부의 담론인 “남존여비 인식의 발로”로 단순화·환원하고 있다는 날선 비판을 적는다. 어느 자살 농촌 여성이 겪었을 남편 사별 후 외로움, 아들의 결혼에 개입하지 못하는 엄마의 무력감, 장래 며느리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경험이 “남존여비 인식”에 갇힌 농촌 여성으로 단순화되어 구술로 전해지는 것에 대한 연구자의 비판이다. 단순화하는 그 구술, 곧 남존여

비 인식에 대한 안타까움을 서평자는 연구자와 공감한다. 그러나 서평자는 연구자 자신이 크게 강조하지 않는 것 하나를 강조하게 된다. 그 자살 여성의 삶에 ‘외로움’, ‘무력감’,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애초에 연구자에게 알려준 것 역시 그 구술자였다는 점이다. 연구자는 재밌게도 이 지점의 구술은 농촌 여성 주체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남존여비 인식’은 똑같은 농촌 여성이 발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부’ 주체의 진술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다보니 중국 근대에서 국가가 아닌 중층적 권력관계나 다른 주체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남존여비 인식’ 역시 실상 농촌 여성 주체의 진술이었다면, 그런 후 이 농촌 여성 주체의 한계(곧, 정부의 담론을 따라가는 한계)를 비판하는 것과 그 진술 자체가 이미 여성 주체의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건 아주 다른 문제이다. 연구자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만약 전자의 입장을 취할 경우, 우리는 드디어 농촌 여성 주체(이 연구에서 그토록 보기 어려웠던)를 만나게 된다. 더 나아가 국가 담론으로 단순화하기 이전의 담론인 ‘외로움’, ‘무력감’, ‘불만’ 등 진정한 담론들을 만나게 된다. 남존여비가 아닌 새로운 농촌 여성 주체 혹은 새로운 중국 근대의 가능성은 여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구해져야 할 것이라 제안한다. 역사적 설명을 무시하는 민속지에 대한 경계가, 역사적 설명에 압도당하는 민속지로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닌지 경계하게 된다. 둘 중 어느 것에도 압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화사회학자의 말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Tavory, 2016).

제4장. 인간존재의 이상으로서 근대를 본격적으로 존재(being or belonging)의 문제와 관련해 탐구한 연구이다. 어쩌서 그러한가 보자. 연구자는 근대를 국가 있음(혹은 존재 있음; state)과 국가 없음(혹은 존재 없음; statelessness)의 양가적 상태와 관련해 접경 지역 이주 여성의 출산과 양육 경험을 바탕으로 파헤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가 있음은 (산모와 아이의) 존재 있음을, 국가 없음은 (산모와 아이의) 존재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게 보통의 인식이라는 이해가 선행한다. 다음으로 서평자는 연구자가 이제 이 인간 존재의 있음과 없음의 문제를 기록 혹은 문서의 물질성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토대 위에서 논의하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이 부분 주장의 핵심은, 국가기구에서 제도화된 국민의 출생·존재의 기록·증명에 앞서 국가기구 이전에 실재하는 개인의 존재가 남기는 흔적(가령, 이주여성의 태아가 남긴 태동의 기록지)이야말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무언가를 불러내는 행동’

이며 그래서 이미 존재 있음을 증명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가의 관리 아래 있는 제도로서의 병원이 기록하는 산전검사지 혹은 출생증명서상 존재의 확인 혹은 존재를 불러내는 행동은 부차적이다. 산전검사지가 없다거나 출생증명서가 없다고 해서 산모와 아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국민으로서 존재하지는 않을지언정. 이것이 연구자가 역설하는 “국가 없음이 국가 있음에 비해 보다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주장의 첫 번째 의미이다. 부연하자면 국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이 인간적 경험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기록·문서 체계를 통해 드러나는 인간 존재의 확인을 간과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민속지적 관찰은 그런 위험으로부터 자유롭다. 국가의 기록·문서 체계(즉, 보편적 기록·문서 체계의 특별한 종류로서)가 가져다주는 존재의 확인, 곧 국가 있음으로부터 오는 존재의 확인 과정이 이주민들에게서 적극적·주체적으로 실천되고 있다는 점을 꼼꼼히 기술하고 있다. 산전검사로부터 거주지 관련 기록과 문서들, 출생증명서, 육아수첩 등을 수년간 차곡차곡 수집하는 일은 그것 자체로서 이주민이 이주국으로부터 시민권·국민됨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는다. 그런 터에 국가의 기록·문서 체계에 포섭되고 강제된 것으로서 이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아직 이뤄지지 않은 무언가를 불러내는’ 행동과 실천으로서 의미를 부여받아야 마땅하다. 이주 여성들은 다른 어떤 것들에 앞서 이 행동과 실천에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 태동의 기록이 (아이의) 존재의 확인이라면, 이들 기록의 수집 행위 역시 (이주 여성 산모와 그 아이의) 존재의 확인으로 이해된다. 이것이 “국가 없음이 보다 보편적인 존재의 경험”이라는 주장의 두 번째 의미이다. 다행히 이 불러내는 행동과 실천이 실제로 무언가, 가령 국민됨을 불러내기에 이른다면 이들 이주 산모와 아이들에게는 더욱 좋은 일이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록을 통한 존재의 구성과 확인은 근대의 한 축을 이루기에 충분해 보인다.

제5장. 2010년 현재 일본 전국 행정기관에 기록되어 있는 고령자 중 상당수가 실제로 아직도 살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장수국가 일본’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김희경의 ‘유령 고령자’

란 이들 생존이 확인되지 않은 기록상의 고령자들을 일컫는다. 여기에 소설적 상상력을 결합해 일본 전역의 이들 유령 고령자에게서 시신 썩는 냄새, 시취가 난다고 적는다. 잠에서 깨어나라는 주문이다. 깨어나서 지금 바로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성찰하라는 것이다. 냄새 맡을 수 있다는 건 이미 우리가 그 불편한 일들에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성찰의 지점, 곧 냄새 맡는 사람마저 깊숙이 간여하고 있는 일이란 메이지유신 이래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의미한다. 일본의 근대, 곧 이상적인 인류 발전의 모습은 어떻게 실천되었나? 경제적·물질적 풍요였다고 한다. 그리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시취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걸 직감하게 된다. 시취가 난다고 이미 이룬 것으로 평가되는 물질적 풍요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그 성격에 대해 성찰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성공적 근대라 할 것인지 아닌지를 재고하게 된다. 성공이라 보였던 것에서 무엇이 썩고 있었을까? 김희경은 근대와 전통의 잘못된 결합이었다고 진단한다. 김희경의 언어로 풀어보자면, 경제적 풍요가 가져오는 부작용들 혹은 경제적 풍요를 성취하기 위해 조달되어야 할 것들(곧 노인 돌봄 혹은 노인복지)을 ‘뒤늦게’ 전통, 곧 효 사상과 가족 책임성 이념에서 해결하고자 한 데에서 사달이 났다. 사회학의 언어로 다시 풀어보자면, 전통 없는 혹은 전통의 대적으로서 근대를 이루고자 했던 애초 기획의 문제, 그리고 그 기획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이제는 마지못해 전통과 근대의 어설픈 섞음을 시도한 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효와 가족을 부정하는 가운데 근대를 이루고자 했다가 나중에는 마지못해 어정쩡하게 효와 가족과 더불어 근대를 이루고자 했던 데에서 생긴 문제이다.

이 시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김희경은 가족과 효를 넘어선 ‘사회적’ 해결책을 시사한다. 사회적 연대 혹은 사회정책적 개입을 의미함이라. 동감한다. 그저 한 가지 질문을 더하고자 할 뿐이다. 김희경의 이 해결책에서 전통과 근대의 섞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애초 시도했던 것처럼 전통을 포기한 채 근대를 좇는 것이 옳다는 함의를 던지는 건 아닌지 반문하게 된다. 대신 이런 대안적 가정을 해보게 된다. 효와 가족을 애초에 보다 적극적으로 근대 곧 경제적 풍요 속으로 가져와 사고하면 어떤가? 효와 가족, 그것은 곧 사회적 연대감 아니겠나. 그 사회적 연대감이 효와 가족의 본질인 것을 잊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

었다. 그러다 보니 효와 가족에서 ‘며느리’만 보이고 딸과 아들 혹은 사위는, 그 확장으로서 이웃은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성찰해봄 직하다. 전통(효와 가족)과 근대(경제적 풍요) 사이 섞임에서 생기는 문제는 섞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섞임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제3장 이현정이 보고하는 있는 중국에서의 전통과 근대 간 관계 설정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시각에서 함께 고민되어봄 직하다.

제6장. 구로공단 여공의 삶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콜센터 여성 상담원 삶 사이에 비유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발견에서 이 연구는 시작한다. 과거의 ‘공순이’ 자리에 현재의 ‘콜순이’가 대신 자리 잡았다는 여성 상담원 자신들의 자가 진단에 기반한 것이다. 이 기대하지 않았던 비유적 관계에 대해 김관옥은 ‘어떻게 과거가 오늘의 현실로 귀결되었는지’를 설명해보겠다고 글의 서두에 적는다. 현재 콜순이들의 생애사적 연구를 기대하게 하는 언술이지만, 글에서 그와 같은 끈끈한 역사적 방식의 과거-현재의 연속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비유적 관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글을 읽을수록 그 관계는 실상 더욱 짙어진다. 사실 김관옥의 관찰 내용은, 공명(resonance)에 관한 최근 사회학 이론(McDonnell et al, 2017)에 기대면 더욱 분명히 전달될 수 있다. 비유적 관계를 이루는 두 문화적 현상은 서로(가령, 콜순이)가 서로(가령, 공순이)를 서로의 구체적 현실(현재와 과거) 속에서 실천해내는 관계, 즉 공명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관점이다. 이때 공명하는 두 문화적 현상이 지칭하는 바는 동일하다.

공순이와 콜순이가 공명해내는 바는 무엇일까? 일하는 여성의 몸이다. 여기에 서 일과 경제에 대한 한국의 근대 기획이 구체화되고, 여성의 몸에 대한 한국의 근대 기획이 구체화된다. 그러나 김관옥의 관찰 내용을 읽어보면, 전자는 있되 후자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평가하게 된다. 구로공단에 그리고 디지털산업단지에 일과 경제적 발전에 대한 이상은 뚜렷이 꿈꾸어졌지만, 여성 몸의 발전에 대한 이상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저 일과 경제를 위한 여성 몸의 동원 정도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의 한국적 근대에서 여성 몸은 일과 만났을 때 신음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고 김관옥은 적고 있는 셈이다. 노동강화 약물(공순이가 먹었던 잠 안 오는 약 ‘타이밍’, 커피, 담배), 엄격한 노동시간 통제, 전화기 너머 공격적 언사 등이 여성 몸에 대한



그 어떤 기획도 압도한다. 이 절망적 상황을 보면, 여성 몸에 대한 기획을 어떻게든 일에 대한 기획에서 분리해내는 것이, 그래서 일과 여성 몸 사이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 지점에서 다시 공명 이론으로 돌아가게 된다.

공명 관계 속 문화현상은 서로서로 단순재현이 아닌 실천 속에서 재구성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한다. 일하는 여성의 몸이 공순이에 의해 실천적으로 재구성되었듯, 일하는 여성의 몸은 콜순이에 의해 실천적으로 재구성된다. 곧 공순이에 의해 실천되었던 여성의 몸이 콜순이에 의해 실천되는 여성의 몸과 많은 부분 비슷하지만 아주 같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이론적 제언인 것이다. 이 같지만 다른 지점에서 일하는 여성의 몸이 새롭게 실천되고 재구성될 수 있는(혁명적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여지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김관옥의 관찰에서 그와 같은 여지는 있는지 다시 짚어 보았다. “사실 젊은 여자들은 힘들어 보이는 데는 돈을 많이 줘도 가질 않는다. 몸 쓰는 건 안 한다. 중략. 콜센터는 딱 생각해 보면 내 책상, 컴퓨터가 있으니깐 현대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름도 잘 지었다. 텔레마케터라고.” 어느 콜센터 상담원의 진술 중 서평자가 가져왔다. 경제의 기획과 몸의 기획 간 긴장이 존재하는 지점이다. 봉제공장과 사무실 사이의 다름이 존재하는 지점이다. 콜순이와 텔레마케터 사이의 다름이 존재하는 지점이다. 김관옥의 현재 연구에서는 이 다름과 긴장이 비유적·공명적 실천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언젠간 알려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거기에서 일과 몸에 대한 한국적 근대에 대한 이해도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7장. 박영수는 많은 사람에게 익숙지 않을 에티오피아의 근현대 역사의 일면을 다룬다. 특별히 에티오피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민족 중 하나인 오로모족이라는 주변부 사회집단의 경험을 토대로 살펴보고 있다. 현지조사를 시작한 이후 오로모족의 경험은 에티오피아 내 다른 지배언어가 아닌 오로모족의 언어로 다뤄져야 한다고 결심하고 그 언어를 새롭게 공부하며 연구했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노력이 눈에 띈다. 박영수가 다루는 근현대사의 범위는 자못 넓다. 국가 형성, 경제 개발, 보건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1차로 일본의 근대화 모델, 2차로 중국 및 공산권의 사회주의 근대화 모델, 그리고 3차로 한국의 발전 국가 근대화 모델 등이 에티오피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살핀다. 일본과 중국의 근대화 모델이 에티오피아에서 어떻게 실천되었는지는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이 그곳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정도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럴 경우, 박영수는 특히 에티오피아로 수출된 한국의 근대화 기획 중 두 가지, 새마을운동과 가족계획사업(산아제한)에 대해 몇 가지 통찰을 제시한다.

새마을운동의 경우 한국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있음을 소개한다. 국가건설의 명목 아래 진행된 독재국가의 통치술이라고 이해하는 입장, 그리고 한국사회 기존의 권위체계에서 주변부에 있었던 주체들(가령, 빈농, 여성농민 등)이 새롭게 주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실천되었다는 해석이 그 둘이다. 푸코의 통치성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재확인되는 지점이다(Foucault, 1991). 이상적 발전의 모습으로서의 근대에 국가(즉, 외부에 이미 확립된 국가들로부터 개인·인종·민족을 지켜내는 단위로서)와 개인적 주체성이 중요한 위치에 놓인다는 점을 재확인하게 되는 지점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새마을운동이 에티오피아에 소개되어 실천되었음에도 또 다른 NGO에 의해 주도된 비슷한 모습의 협동조합 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관찰이다. 박영수의 기술은, 에티오피아의 새마을운동이 국가형성 외에 새로운 개인적 주체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었던 데 반해, 협동조합 운동은 개인적 주체성을 만들어가면서도 개인과 민족을 지켜가는 연대의 단위마저(비록 국가는 아닐지라도) 만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시사한다. 곧 근대, 즉 이상적 인류발전의 모습이 에티오피아에서는 어떻게 상상되고 실천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점이다.

가족계획사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의 중층적 의미(국가 단위 경제지표 개선을 위한 인구억제책이면서 동시에 가부장제에서 벗어나 자율과 해방을 추구했던 여성들의 실천이라는 의미)에 비추어보면, 에티오피아에서 이 한국식 가족계획사업이 의미 있게 실천되려면 단순히 인구억제책 이상의 의미를 지녀야 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특히 오로모족의 입장에서 가족계획은 여성 개인의 해방과 자율의 의미는커녕 국가 단위 정치적 기획으로도 이해되지 못하며 오히려 오로모족의 반대편에 있는 민족들의 하위국가적 민족적 기획으로 이해되는 단계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오다 나무 아래에서의 가다 회의와 같은 에티오피아 전통의 민주주의적 과정(곧 개인의 주체성이 발휘되는 과정)이 되

살아나지 않고서는, 새마을운동이건 가족계획사업이건 협동조합 운동에서와 같은 의미 있는 실천, 곧 근대를 향한 실천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상호작용하는 곳’으로서의 근대는 그렇게 구체화할 것으로 이해된다.

투고일: 2019년 1월 5일 | 게재확정일: 2019년 1월 23일

## 참고문헌

- Bowker, Geoffrey C and Susan Leigh Star. 2000. *Sorting Things Out: Classification and Its Consequences*: MIT press.
- Foucault, Michel. 1982. “The Subject and Power.” *Critical Inquiry* 8(4), 777-95. doi: 10.1086/448181.
- \_\_\_\_\_. 1991. “Governmentality.” pp. 87-104 in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edited by G. Burchell, C. Gordon and P. Mill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alberg, Stephen. 1980. “Max Weber’s Types of Rationality: Cornerstones for the Analysis of Rationalization Processes in Hist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5(5): 1145-79.
- McDonnell, Terence E., Christopher A. Bail and Iddo Tavory. 2017. “A Theory of Resonance.” *Sociological Theory* 35(1): 1-14. doi: 10.1177/0735275117692837.
- Shim, Jae-Mahn. 2018. “Three Plural Medical Systems in East Asia: Interpenetrative Pluralism in China, Exclusionary Pluralism in Korea and Subjugatory Pluralism in Japan.” *Health Policy and Planning* 33(3): 401-10. doi: 10.1093/heapol/czy001.
- Tavory, Iddo. 2016. “Interactionism: Meaning and Self as Process.” pp. 85-98 in *Handbook of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y*, edited by S. Abrutyn: Springer.

